

5월 광주서 범여 대통합 '물꼬'

5·18 기념식 앞두고 대선주자 대거 집결 통합 구상 발표·연석회의...범여 재편 고비

5·18 광주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이 대거 광주로 집결할 예정이어서 5월 광주 민심의 향배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대선 정국에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범여권에 위기에 단결하는 '5월 정신'을 불어넣어 대통합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8일 각 정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따르면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오는 17일 광주를 방문, 조선대에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근태 전 의원은 오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식 등 주요 행사에 참석한다.

정동영 전 의장도 오는 13일 광주를 방문, 범여권 대통합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김근태 전 의장은 오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열린우리당 예비 대선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한명숙 의원과 김혁규 의원의 18일 이전 광주를 찾아 범여권 대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2일 광주를 방문, 전남도당 당원들과 무등산행에 나설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표도 오는 18일 5·18 기념식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범여권 대선 주자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공동참배 등을 통해 대통합의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오는 6월10일(6·10 항쟁) 이전에 대통합의 물

꼬가 터지지 않는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범여권 대선 후보 진영에서는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제안한 '범여권 대선주자 망월동 공동참배 이후 원탁회의' 방안이 대해 긍정적인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계기로 한 범여권 연대 움직임은 정치권 만 아니라 시민·사회세력이 가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8일 "5·18 망월동 참배를 계기로 (범여권) 유력 대선주자와 제 정파 대표들이 연석회의를 갖자"고 공식 제안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단-정 조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5·18 27주년을 맞아 광주항쟁의 뜻을 받들어 대통합을 이루는 방안을 고민하는 좋은 만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오는 15일 조지 통합을 마칠 '미래구상'과 '통합과 반영을 위한 국민운동'은 18일 재야·시민운동가 1천여명의 대규모 5·18 묘지 참배와 함께 범여권 대선주자들을 초청, 대통합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5월 범여권 박병실은 오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현실화될 것"이라며 "결국 5월 정신은 범여권 대통합의 결정적 계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에서 대통합의 시한인 6월 14일 이내에 대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장 대표는 "5·18을 맞아 범여권 주자간 연석회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연합뉴스

나주 이전 한전 썩데기만 오나

■서울 본사 매각 거부 파장

나주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전력이 본사 부지 매각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이면서 자칫 한국전력의 이전이 '무늬'만 이전하는 행태가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애초부터 본사 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했다. 서울 본사 건물은 감정가가 1조원에 달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큰 만큼 매각보다는 일부를 서울지사로 활용하고, 남은 사무실은 임대하는 것이 재산운용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계산이었다.

지난 2005년 나주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확정됐을 당시에도 본사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006년 1월 나주에서 열린 '시도민 한마음대회'에서 산자부장관이 '선 매각, 후 이전'을 요구하자 당시 한준호 한전 사장이 '매각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을 뿐이다.

본사 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한전의 입장은 복잡하다. 한전은 "정부 지분이 20%에 불과하고 외국인 주주가 많은 한전의 자산을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전 본사 부지가 특정 재벌에 매각될 경우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반한다는 점을 매각 반대의 논리로 들었다. 이경호 한전 노조 대의협력담당국장은 "한전이 나주로 가는 것은 한전 노조원들도 이미 찬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노조는 본사 부지를 S그룹 측에서 매입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에 경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사 부지가 특정 재벌 그룹 측에 넘어갈 경우 재벌 집중,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중돼 애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도 취지를 잃게 된다"면서 "이 같은 차원에서 부지매각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현재 본사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 전남도, 지역 전문가들은 한전이 본사 부지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16개 공공기관들의 본사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더라도 본사 부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서울사무소의 기능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어 이전 과급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우 본사 직원은 1천125명이지만 관련 기업들을 포함하면 총 2만800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다.

결국 한전의 서울사무소 기능이 유지되면 관련 기업들의 동반 이주는 어렵고, 이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 17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제한해 인구 5만명을 목표로 한 혁신도시 계획 자체가 흐트러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전은 예산이 29조 5천482억원에 달하는 최대 공공기관으로서 이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은 185억원이며, 고용 효과 1천577명, 생산유발효과 8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건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전의 이전은 나주 공동혁신도시의 성과와 직결되는 만큼 시·도가 합심해 한전 측이 본사를 매각한 후 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新에너지산업 집중육성

광주시, 4개 분야 2천여억 투입

광주시는 8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한국전력공사가 이전하는 것과 연계해 신에너지 산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했다. 시가 육성할 신에너지산업은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신·재생에너지 산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한국전력연구원 광주분원 유치 등 4개 분야다.

시는 이날 한전·대학·연구기관·업체 등 관계자 20명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첫 회의를 갖고 이들 4개 분야를 주축으로 '한전 이전에 따른 신에너지 산업 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에너지클러스터 구축사업의 경우 차세

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등에 주력하고, 지역에너지연합대학원 운영·신재생 에너지산업 투자조합설립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수소버스 시범운영·에너지파크 조성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도 계획하고 있다. 시는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전력연구원 광주분원'을 유치해 태양광 발전 실증연구 여건을 확충하고, 수소·연료전지 연구기반도 확고히 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산업자원부·한국전력 등과 협의해 사업추진 우선순위 및 지원방안을 협의해 2011년까지 이들 사업에 2천여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노무현식 구태정치” “자기들만 살겠다고...”

친노-비노 감정싸움 격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김근태 정동영 전 의장간의 당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친노(親盧), 비노(非盧) 세력간의 감정 싸움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다.

비노 세력을 주도하고 있는 김, 정 전 의장은 노 대통령의 정치를 각각 '분열정치', '공포정치의 변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친노파들은 "위기때면 누군가 밟는 체질", "비검합의 극치"라며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두 전직 의장의 비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청와대로 정무팀 명의의 글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을 뿐, '자체 모드'를 유지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정책발표회에서 자심한 듯 "상대방에게 딱지를 붙이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식 분열정치이자 구태정치"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당해체를 주장하려면 나가라고 하는 데 누가 누구보고 나가라는 지

이해가 안된다. 당적이 없는 대통령은 자숙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노무현 정치는 분과주의, 분열주의 썩데기만 남았으며 장거에서 혼수를 거둬하면 장거기가 없어진다. 이제 꽃노래는 그만하기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전 의장도 전날 노 대통령의 글에 대한 답글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을 "공포정치의 변종"으로 규정하고 "통합의 노력에 대해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이 물거품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대통령의 비판과 패배주의는 위험한

진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친노파 대선 잠룡(潛龍)으로 분류되는 김혁규 의원은 "장단주역인 두 사람이 당이 어렵다고 해서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만 살겠다고 당을 뛰쳐나가겠다는 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나라꼴이 우습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노' 인사에 속하는 김부겸 의원도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두 분은 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의 정책에 공동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당사자"라며 "그런 분들이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어이가 없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제약품 기원관과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캄보디아 제 11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보"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한마디 말로도

당신곁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병에는 약리의 화학작용 이외에 마음의 화학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사랑이 먼저인 사람들에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설 때마다 국제약품은 무엇을 베풀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약리의 과학과 함께 사랑의 힘을 믿는 회사 사랑으로 건강해 지는 세상 국제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사랑의 효능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



아름다운 입술
SENSTICK